

2017.9.19

국립대만대학교

제4회 한국-대만 인문교류대회

기조연설

반세계화 추세 강화와 중소기업경제; 한국과 대만의 대응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재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한국-대만 인문교류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양창수 주 타이페이 한국대표부 대표와 장 칭루이 국립대만대학교 총장대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대만은 오랜 가까운 이웃으로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국민 간의 동질감과 상호이해에 기초한 긴밀한 협력과 유대강화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국-대만 인문교류대회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은 정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와 국립대만대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저는 오늘 “반세계화 추세 강화와 중소기업경제인 한국과 대만의 대응”이란 주제로 세계경제여건 변화의 큰 틀 속에서 대외개방도가 남달리 높은 한국과 대만의 지속성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대응 방향에 관해 몇 가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세계제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온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의 장점을 가장 잘 이용하여,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이 자유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는 과거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지속성장과 전 인류의 놀라운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절대빈곤 퇴치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세계는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고 혼란스런 질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제일(America first)이란 국가우선주의 기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해서 창출·유지해온 기존 세계질서를 거부하고, 일방주의(unilateralism) 혹은 상무주의(bilateralism)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주의에 나서고 있어 세계경제 전체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는 한국과 대만과 같은 중·소규모 개방경제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가능

하게 한 현재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현상을 불러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무엇보다 먼저, 1대 99퍼센트로 대변되는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이들 나라 중산층의 좌절이 기존 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을 갖게 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의 소득분배의 악화와 소득양극화가 기존 질서 하에서 가속화되고 한층 더 심화된 세계화(globalization)와 자유무역보다는 빠른 기술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물론 세계화는 기술변화 자체를 더욱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차원이 아닌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나 공장문을 닫아야 했던 기업인들에게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기영합 정치가 쉽게 먹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화의 한 측면인 이민과 나날이 더 난폭해지고 있는 테러에 대한 공포감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이민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의 빠른 인구구성 변화와 유럽연합의 회원국 주민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따른 이민의 증가는 주민 간의 가치관과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기존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조장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브렉시트와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크게 부각된 바 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경제전문가

들을 포함한 소위 엘리트(elite) 그룹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거시경제 차원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미시경제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은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그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재훈련 체제 마련에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실직근로자들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실업보험과 함께 새 직장을 찾고 새 직장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배려는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아주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국가전체 차원에서 무역으로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이득을 보면서 수입증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을 보상하기 위한 무역조정보상 관련 정부지출은 일년에 10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기간에 공약한 바와 같이 무역수지 개선 명분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조정을 위한 조치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스스로의 거시경제적 문제, 다시 말해 저축과 투자 간의 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국내법에 근거한 일부 무역제한적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고 앞으로 미국은 무역상대국에게 상호주의(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평평한 운동장(level-playing field)을 강조하면서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의 모든 교역국은 미국에게 보호무역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내제도와 불투명한 행정행위는 미국의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스스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의식적인 환율조작도 포함됩니다. 현재 워싱턴 분위기를 감안할 때, NAFTA 개정뿐 아니라, 다른 FTA에도 환율 관련 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특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일 뿐 아니라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불가피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가와의 각종 통상분쟁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의 세계적 고민은 현재 미국을 대신하여 기존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였던 찰스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세계대전은 세계질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십이 없었던 결과 초래된 것이란 소위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세계질서를 이끌어 온 영국은 이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미 영국경제를 앞선 미국은 능력은 있었지만, 세계가 필요한 리더십 발휘에 나서지 않아 세계가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게 되어 대공황과 세계대전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초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화와 자유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앞장서서 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의지 천명은 세계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꼭 다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사(rhetorics)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과거 미국처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공공재(public goods)(세계평화유지, 자유무역여건 조성, 세계금융·외환 안정) 창출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그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각종 보호무역주의적 보복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시진핑 주석의 자유주의질서 수호 선언이 무색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금융 면의 높은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Sparta)가 신흥강국인 아테네(Athenes)의 부상에 위협을 느껴 펠로폰네시안(Peloponnesian)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소위 투키디데스(Thucydides) 함정에 빠져 미·중간 전쟁과 같은 지구촌이 대재앙을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과거에 세계가 경험했던 바와 같은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글로벌 리더십 적자(global leadership deficit)에서 비롯된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계질서의 혼란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과 같은 중소개방경제의 대내외 정책과제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략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자유무역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은 모든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주의 거부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주요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무역과 금융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이 국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더하여 더욱 가속화될 기술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세계 상품 무역은 과거처럼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품 무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거에 비해 낮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조치와 함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상품 무역 성장세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의료·보건·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함도 강

조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한·미 FTA에 대한 조정 요구를 오히려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계기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전반적인 교육개혁과 근로자의 훈련·재훈련 체제 마련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 앞장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제4차 산업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제를 대폭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과 대만이 이러한 긴 안목의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금융위기는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2007/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세계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덮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금융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미국 연준(Fed)은 금리를 상향조정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유럽중앙은행(ECB)도 단계적 유동성 흡수 시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중앙은행도 언젠가는 유동성 흡수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흔들림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요 주변국들과의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통화스왑을 포함하는 다양한 금융협력 방안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내수요 진작 조치에 따라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버블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제의 근본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과거 세계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한국과 대만의 기적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중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주어진 세계경제 여건을 남다른 지혜로 잘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두 나라 정책담당자들과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